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7
----------	------

발의연월일 : 2024. 7. 9.

발 의 자 : 김 건 · 김미애 · 김기현
서일준 · 한지아 · 안철수
박성민 · 최수진 · 박수민
김상훈 · 신동욱 · 박충권
권영세 · 조배숙 · 주진우
조경태 · 이만희 · 백종헌
박수영 · 유용원 · 이성권
이헌승 · 엄태영 · 우재준
김위상 · 인요한 · 송언석
정성국 · 주호영 · 강대식
김승수 · 정희용 · 조정훈
이철규 · 조지연 · 김정재
이인선 · 윤상현 · 김성원
조승환 · 이종배 · 서명옥
강명구 · 최보윤 · 김형동
박상웅 의원(46인)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

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하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 또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치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외교부장관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경
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 결의”라 한다)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채택한 권고·조치 등의 결정문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권익 확보) 안보리결의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외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행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보리결의의 공표) 외교부장관은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에 반영한 내용의 이행경과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